

비교적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선진민주주의의 3국 일본, 한국 및 대만의 재분배 선호

강명세 세종연구소

이 글의 목적은 동아시아의 복지국가에 대한 선호를 비교적 시각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며 사회적 선호는 정치엘리트에게 민의를 제시하는 귀중한 정보이다. 최근 복지국가의 미시적 기반을 형성하는 사회적 선호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복지태도에 대한 연구는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요인과 정치성향을 중심으로 한 전통을 갖고 있다. 최근 연구는 개인의 선호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및 문화적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 후자는 개별 국가마다 역사적으로 다르게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비교연구의 중요한 준거이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왕성하게 발전해온 재분배 선호에 대한 간략히 논의한다. 둘째, 선호 문헌을 기반으로 재분배 선호를 종속변수로 하고 이를 설명하는 소득과 그 외 다양한 설명변수를 제시한다. 셋째 부분은 경험적 조사이다. 가장 최근 조사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WVS 6)가 제공하는 경험적 자료를 기반으로 선진민주주의의 대표적 복지국가유형을 대표하는 미국, 독일 및 스웨덴의 사례와 동아시아 선진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일본, 한국 및 대만의 사례를 비교한다. 비교는 소득집단, 문화적 가치, 그리고 당파성(partisanship)의 차이가 소득평등주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집중한다. 넷째, 결론으로서 성과와 논의를 요약한 뒤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

주제어 재분배, 사회적 선호, 동아시아 민주주의, 복지국가

I. 서론: 재분배 선호

불평등은 나라마다 크게 차이가 있다. 선진민주주의 체제에서도 미국처럼 불평등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스웨덴처럼 평등한 나라도 있다.¹ 왜 나라마다 불평등 수준이 다르고 이것이 지속되는 것인가? 민주주의가 민의를 반영한다면 미국

* 이 논문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기획과제 〈동아시아 국가의 시민선호와 복지국가〉의 결과물이며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3A2066491).

¹ 불평등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가 미국에서 시작하여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다(Bartels, 2008; Gilens, 2012; Piketty,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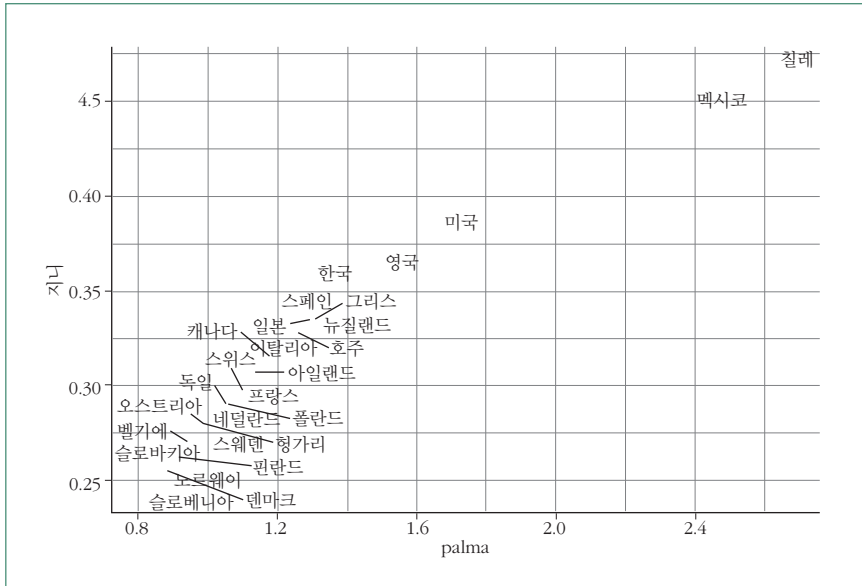


그림 1 소득불평등, 2017

인은 불평등을 선호하는 것인가?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은 미국 못지않게 불평등하다. 그림 1은 지니계수와 팔마지수를 동시에 보여주며 한국과 일본은 미국보다는 약간 나은 단계에 있다. 평등에 대한 선호는 재분배와 복지국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요구이다. 이 글은 동아시아 민주주의에서 평등에 대한 사회적 선호가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복지국가 연구는 전통적으로 사회지출의 규모가 불평등 정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심을 두었다. 대표적 연구인 에스핑-앤더슨은 사회지출의 질적 및 양적 차이에 주목하여 복지국가의 성격을 밝히는데 기여했다.² 두 번째 접근법은 선호에 무게중심을 둔다.³ 그 출발점은 멜처와 리처드가 대중화시킨 재분배 모델이다(Meltzer and Richard, 1981). 이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이익증진을

² 대표적 연구로는 Bradley(2003), Huber and Stephens(2014), Kenworthy and Pontusson(2005) 등이 있다.

³ Pontusson and Weisstanner(2017)은 복지 국가 연구의 동향을 비교 정치 경제의 두 가지 흐름 속에서 논의했다.

도모한다는 효용함수를 가정하고 중위소득의 선호를 기반으로 하여 불평등이 증가하면 재분배가 늘어난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론적 예상과는 달리 실제 경험은 정반대라는 도전이 제기되었다(Iversen and Soskice, 2009; Lupu and Pontusson, 2011). 고소득자는 재분배를 반대하고 저소득자는 지지한다는 가정이 다. 신고전과 경제학은 사회적 선호가 다른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보험적 접근은 소득분포 상에서 중위투표자의 위치가 재분배를 결정한다고 가정한다. 민주주의에서 중위투표자의 상대적 소득이 감소하지 않으면 소득재분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Iversen and Soskice, 2001; Rehm, 2015). 불평등이 주로 빈곤층에 집중될 경우 중간층이 빈곤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소득분포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⁴ 실업문제가 비정규직 등에 집중되면 실업리스크가 적은 정규직 등 중간층에서는 정부가 실업급여를 삭감하는 데 반대할 필요가 없다(Pontusson and Weisstanner, 2017).

사회적 선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다. 소비와 휴가를 핵심적 효용으로 가정하는 전통적 연구는 소득을 핵심적 결정요인으로 믿었다. 정치학에서는 당파성(partisanship)이 정책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가설을 제시해왔다.⁵ 당파성 이론은 좌파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과 우파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정책을 지지한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재분배를 의미하는 소득평등은 당파성의 정책선호를 표출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의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효용함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단순히 소비와 휴가만이 아니라 문화나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포함하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Alesina and Giulaino, 2009). 선호 중심의 연구는 다시 문화적 가치에 주목하는 접근과 보험적 동기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분리된다. 문화적 접근은 인종적 변수가 재분배의 규모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한다(Alesina and Glaeser, 2004). 유럽과 미국을 비교

⁴ 양극화는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미국에서 재분배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이다. 이에 대해서는 Bartels(2008)가 예리하게 통찰했다. 정치 엘리트는 정치 참여에 소극적인 빈곤층이 아니라 정치참여에 적극적인 부유한 투표자를 위해 입법 활동을 한다.

⁵ Hibbs(1977)는 당파성 이론을 정교히 발전시켜 정부의 정책 이념이 거시 경제 정책의 큰 줄기를 결정한다는 이론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다. Boix(2003)는 당파성을 공급주의적 관점에서 보완하여 여전히 당파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면서 미국의 복지가 취약한 것은 복지 수혜자가 흑인 등 소수 인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유럽에서는 이민이 개인적 선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힘을 발휘하고 있다.⁶

셋째, 사회적 이동이 재분배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결정한다는 논의가 있다. 신분 상승 가설(Prospects of Upward Mobility: POUM)은 사회적 이동(social mobility)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생겨나는 사회적 선호를 의미한다(Benabou and Ok, 2001). 지금은 지위가 낮고 소득도 적은 사람이 내일은 소득이 많아져 신분을 상승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다시 말해 신분상승이 가능하다면 사회적 부조를 뜻하는 재분배를 지지할 필요가 없다. 재분배선호 혹은 평등주의는 소득 외 다양한 기반을 갖는다.⁷ 첫째, 개인사의 경험이다. 어려운 시절에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은 리스크 회피적이고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기 쉽다(Piketty, 1995). 대공황처럼 대규모 경제적 곤란을 경험한 사람은 소득재분배에 대하여 우호적이다. 둘째, 최근 선호에 대한 문화적 영향력이 각별한 주목을 끌고 있다.⁸

넷째, 가치와 신념으로 구성된 문화가 재분배 선호에 중대한 영향을 행사한다는 문헌이 있다. 문화적 요인으로는 두 가지가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⁹ 정부 정책은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정부정책이 얼마나 공정한 것으로 믿는가는 정부의 재분배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는데 중요하다(Scheve and Stasavage, 2017). 공평성의 가치(fairness)에 대한 태도는 소득과 부의 형성과정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평가로서 소득평등주의에 영향을 준다.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신념이나 ‘운칠기삼’ 등의 가치에 대한 태도는 공적인 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준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또는 ‘긴병에 효자 없다’ 등의 속담은 개인의 선호

⁶ 1990년대 이후 유럽에 중동 및 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이 대량 증가하면서 유럽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질적 사회일수록 재분배에 대한 지지가 낮은 반면 동질적 사회일수록 높다는 가설을 제시했다(Alesina et al., 2019).

⁷ 재분배 선호가 어디서 비롯하는가에 대한 문헌 검토는 Alesina and Giuliano(2009) 참조.

⁸ Alesina and Glaeser(2004)는 미국과 유럽의 서로 다른 사회적 선호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이에 대한 선구적 연구를 시도했다.

⁹ 문화적 요인에 대한 문헌 논의는 Alesina and Giuliano(2009), Alesina and Giuliano(2015) 참고.

에 영향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적 압력이다. 사회적 압력은 지배 엘리트가 위로부터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¹⁰ 그 효과는 지배 엘리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불평등 민주주의 이론은 엘리트가 대중의 선호를 조작한다면 저소득자는 고소득자처럼 재분배 정책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Bartels, 2008: 287). 경제적 불평등이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이 재분배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여론 조작이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한다.¹¹

다섯째, 사회경제적 요인이 재분배 선호에 영향을 준다. 사회경제적 요인은 교육수준과 소득을 포함한다. 소득이 높으면 저소득자에 비해 재분배를 지지하지 않는다. 재분배의 재원은 고소득에 대한 과세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교육이 재분배 선호에 주는 효과는 최근 다른 각도에서 나타난다. 교육이 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교육이 일차적으로 여론형성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선호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 착안한다(Weaklim, 2002).¹² 교육은 자유주의를 함양하는 동시에 권위주의를 배격하는 사회적 결과를 낳는다. 고학력자는 권위주의를 멀리하고 자유주의를 지향하며 따라서 불행한 이를 배려하는 경향이 있다(Stubager, 2008; 2009).

교육이 소득창출의 도구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고소득자는 학력이 높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교육과 소득을 분리하여 교육의 사회적 능력을 분다면 소득과의 관계가 일직선은 아니다. 교육이 재분배에 대한 긍정적 관계를 맺은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교육은 공공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유층에서는 재분배 자체에는 반대하지만 공교육 확대에는 찬성한다.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의 발달은 전반적인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 자체의 기능은 재분배에 호의적 태도를 길러낸다. 고학력자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왜 중요한지 배움으로써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에 호의적일 수 있다(Weaklim, 2002).

¹⁰ 이에 대한 최근 논의는 Kelly and Enns(2010) 참고.

¹¹ 엘리트 계층에서 정보를 조작하고 왜곡하여 대중적 선호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Jacobs and Shapiro(2000) 참조.

¹² 교육의 효과에 대한 문헌은 오랜 역사를 갖는다. '계몽 가설'은 교육은 지식과 지적 정교함은 전통적 가치의 전근대성을 경고하고 자유주의적 가치를 일깨워 준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육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허용하도록 한다. 핵심 가치설은 교육은 사회가 지켜야 할 핵심적 가치와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43).

문화적 요인은 첫째로 성공을 가져오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근면성과 행운을 연관시킨다. 문화적 요인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선호가 시간의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은 빈한하지만 노력으로 내일은 부유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다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과 재분배에 대한 선호가 다르다. 나아가 한 사회의 불평등 정도는 개인의 소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불평등이 높으면 범죄율이 증가하고 범죄가 많을 경우 소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III. 자료와 회귀 모형

경험적 연구에 사용할 자료는 2010~2014년 동안 실시된 세계가치조사(wvs: World Value Survey) 6차 조사이다. 2010~2014년 동안 실시된 세계가치조사 6차 조사에서 소득 평등인식에 대한 항목은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계가치 조사는 국제사회조사와 달리 직업에 대한 설문에는 누락이 많아서 계급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 없다. 하지만 소득과 교육에 대한 자료 외에 문화적 항목에 대한 설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나름의 장점이 있다.

연구는 세 가지 단계로 진행한다. 첫째, 비슷한 제도를 공유한 나라를 대상으로 재분배 선호를 비교한다. WVS 6차 조사에는 총 57개국에서 조사에 참여했으나 그 가운데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민주주의가 20년 이상 정착한 것으로 평가받는 23개국으로 한정한다. 문화적 가치가 재분배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가 확립되고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나라를 대상으로 한다.¹³ 둘째, 비교의 준거틀로서 복지국가의 전통적 유형에서 나타나는 소득평등의 선호를 논의한다. 자유주의, 대륙형, 그리고 사민주의 복지체제의 대

¹³ 비교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제도는 가치 형성에 가장 기본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진 민주주의라는 공통된 제도 하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만의 2018년 1인당 GDP는 2만 5,002달러, 한국과 일본은 각각 3만 1,370달러와 3만 9,311달러이다.

표로 일컬어지는 미국, 독일 및 스웨덴의 사례에서 재분배 선호가 어떤 모습을 갖는지에 대해 논의한다.¹⁴ 셋째, 동아시아 선진민주주의에 해당하는 일본, 한국 및 대만의 사례에 집중한다.¹⁵ 서구 선진민주주의 3국에서 발견된 독립변수에 대한 논의는 동아시아 선진민주주의의 3국 즉, 일본, 한국 및 대만의 사례를 비교 연구하는 데 비교준거의 역할을 할 것이다.¹⁶

$$\text{소득은 평등해야 한다}_i = \alpha_i + \beta_i [\text{운칠기삼}, \text{정부책임}] + \gamma_i X_i + \varepsilon_i \quad (1)$$

위의 식은 자료를 이용할 기본 모형이다. 종속변수는 소득평등에 대한 선호이다. 세계 가치 조사의 설문(v27)은 소득평등과 관련하여 ‘소득은 더 평등해져야 한다’(1)부터 ‘노력하는 만큼 차이가 나야 한다’(10)의 응답을 제시한다. 0과 1의 연속변수로 전환시키거나 6 이상의 응답을 소득평등을 지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더미변수화하는 것이다. 종속변수는 두 가지 형태이다. 첫째는 0부터 1까지 전환한 연속 변수이며 둘째는 5 이상의 응답을 더미변수로 처리했다. 그림 2는 6 이상의 응답비중이 나라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보여준다. 소득평등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은 나라는 인도이며 가장 적은 국가는 말레이시아이다. 미국, 독일 및 스웨덴의 소득평등 선호는 각각 49%, 79% 및 59%로 독일이 가장 높고 미국은 가장 낮다. 일본, 한국 및 대만의 수치는 각각 58%, 32% 및 42%로서 동아시아 선진민주주의의 평등선호 순서는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 순이다.

위의 식과 6차 세계가치조사를 통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소득, 교육, 정당

¹⁴ 미국의 조사는 2011년 실시되었고 사례 수는 2,232, 독일 조사는 2013년, 사례 수는 2,046, 그리고 스웨덴 조사는 2011년 사례 수는 1,206이다.

¹⁵ 일본, 한국 및 대만의 조사 연도와 사례 수는 각각 2010년 2,443, 2010년 1,206, 그리고 2012년 1,238이다. 민주주의 정도를 평가하는 프리덤하우스(Freedomhouse) 평가에 의하면, 2018년 일본과 대만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가 각각 1, 1을 얻은 반면 한국은 2, 2로 약간 떨어지지만 2 이하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¹⁶ 최근 선진 민주주의를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는 2만 5천 불 이상의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선진 민주주의로 정의하고 일본을 연구 사례에 포함했으나 한국은 제외되었다. 일정 이상의 인구를 제한하면 아시아에서는 일본, 한국 및 대만이 선진 민주주의에 포함된다(Beramendi et al.,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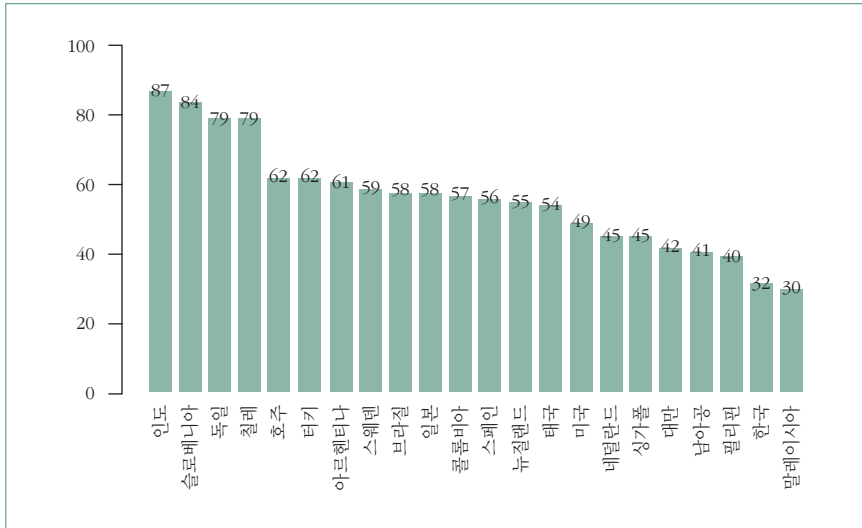


그림 2 소득은 더 평등해야 한다(단위: %)

외에 문화적 요인이다. 문화적 가치를 대변하는 성공을 가져오는 요인에 대한 태도와 개인의 복지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인식이 소득평등의 선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본다.

위의 식에서 X는 문화적 요인 외의 모든 변수를 총괄한다. 소득평등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구학적 요인, 즉 성과 나이이다. 문헌은 여성이 소득평등을 더 지지한다고 보고한다.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남성에 비해 임금이 낮고 가정에서는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으며 공적 복지를 지지한다. 나이 효과는 나이가 많을수록 노동시장에서 벗어나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복지정책을 지지한다고 가정된다. 둘째, 권력자원의 분포를 결정하는 소득과 학력에 주목한다. 소득규모는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다. 설문은 10개의 구간에서 응답자가 자신의 소득정도를 선택하게 만든다. 학력은 교육정도를 의미하며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습니까?’의 질문에 대한 9개 응답 가운데 선택된 것이다.¹⁷ 소득과 학력은 높은 상관관계에 있지만 이는 국가별로 다르다. 고등

¹⁷ 응답은 정규 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1)부터 대학교(9)까지 9가지로 나뉜다.

교육의 학력자는 타인의 복지에도 배려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¹⁸ 개인의 당파성은 정책적 선호에 영향을 준다. 전통적으로 소득격차해소에 대한 정책은 좌우 차이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투표자의 정치적 성향은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선택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중요하다 (Brooks and Manza, 2007). 세계가치조사는 지난 선거에 어느 정당을 선택했는가를 물어으로써 정치적 선택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한다. 정당선택은 좌우 정당에서 제시한 정책에 대한 지지로 가정한다. 이러한 정보는 보수와 진보가 소득평등에 대한 태도에서 얼마나 다른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문화적·심리적 요인이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해 두 변수를 추가했다. 성공에 필요한 것은 노력인가 아니면 운인가에 대한 태도와 복지담당문제에 대해 정부 책임과 개인책임에 대한 태도를 변수화했다. ‘운칠기삼’에서 보듯,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노력보다는 운으로 보는 태도이다. ‘운칠기삼’은 신분이동의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사다리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은 소득평등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많다. 또한 정부책임보다는 개인 책임으로 보는 사람은 복지는 더 많은 조세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평등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성공의 요인에 대한 응답은 1-10의 구간이며 ‘근면이 필수적’은 1, 그리고 ‘순전히 행운’은 10을 의미한다. 근면을 성공의 조건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잘살 수 있다고 보며 빈곤은 나태한 탓으로 생각하기 쉽다. 이런 사람은 재분배를 찬성하지 않는다. 반대로 운이 나쁜 결과라고 믿는 이는 불평등을 교정할 재분배를 지지한다. 둘째, 개인의 행복행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설문은 정부 책임과 개인 책임의 1-10의 응답값을 갖는다. 자신의 불행을 정부 책임으로 인지하는 사람은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사람에 비해 평등주의에 경도할 가능성이 많다.

¹⁸ Piketty(2018)는 프랑스, 미국, 영국을 비교 조사하면서 고학력층에서 정치적으로 진보 정당을 지지한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교육의 역할을 강조한다.

III. 누가 소득 평등을 지지하나?

앞에서 논의한 바처럼, 소득평등에 대한 지지는 나라마다 크게 다르다. 이 차이에 유념하면서 논의의 첫 단계는 전체 자료에서 소득평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것이다. 표 1은 23개국 전체와 미국, 독일 및 스웨덴을 각각 개별로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표 1은 등식(1)에 기반하여, 미국, 독일 및 스웨덴을 대상으로 소득 평등에 대한 선호를 종속 변수로 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이다. 첫째 줄은 전체 23개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나머지 줄은 미국, 독일 및 스웨덴을 대상으로 한다.¹⁹ 나

표 1 평등주의의 결정 요인: 미국, 독일 및 스웨덴

	전체	미국	독일	스웨덴
나이	0.0002** (0.0001)	0.002*** (0.0004)	0.001 (0.0004)	0.001** (0.001)
여성	0.008*** (0.003)	0.036*** (0.014)	0.026* (0.015)	0.031 (0.021)
학력	-0.003 (0.006)	0.172*** (0.047)	-0.057* (0.030)	-0.093** (0.046)
소득	-0.266*** (0.005)	-0.396*** (0.026)	-0.246*** (0.026)	-0.263*** (0.045)
개인 책임	-0.123*** (0.007)	-0.107*** (0.035)	-0.138*** (0.041)	-0.103* (0.061)
행운	0.0002 (0.005)	0.028 (0.027)	0.055** (0.027)	0.072 (0.044)
진보 정당		0.100*** (0.017)	0.049*** (0.015)	0.138*** (0.025)
Observations	34,807	1,244	1,038	520
Adjusted R ²	0.212	0.327	0.138	0.244
Residual Std. Error	0.279 (df = 34778)	0.239 (df = 1236)	0.235 (df = 1030)	0.238 (df = 512)

주: *p<0.1; **p<0.05; ***p<0.01

¹⁹ 전체 23개국을 대상으로 한 회귀 분석에서 정당 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진보 정당 지지 변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의 영향을 보면 미국과 독일에서는 나이가 먹을수록 소득은 평등해야 한다고 믿는 반면, 스웨덴 사람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여성의 판단 역시 미국과 독일은 스웨덴과 반대이다.²⁰ 학력의 효과는 나라별로 다르다. 미국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평등주의를 지지하며, 이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스웨덴과 독일에서는 반대로 고학력일수록 소득 평등에 부정적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각각 5%와 10%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스웨덴의 경우 교육 수준이 한 단계 높으면 소득 평등에 대해 약 9% 더 반대한다. 세 나라 모두 1% 수준에서 소득의 정도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다.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 평등에 반대하는 것이다. 복지가 정부 책임이 아니라 개인 책임이라고 믿는 사람은 모든 나라에서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소득 평등에 반대한다. 성공이 노력의 결과이기보다 행운과 연줄의 결과로 보는 사람은 소득 평등을 강조한다. 노력보다는 행운이 성공을 만든다고 믿는 사람은 리스크 회피적인 점에서 평등주의를 지지한다. 이 긍정적 태도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미국, 독일 그리고 스웨덴 모두에서 동일하다.

표 1의 진보 정당 변수는 내일 선거가 실시된다면 어떤 정당을 지지할 것인지 묻는 정당 지지를 의미한다. 이는 정치적 변수가 소득 평등에 대한 선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유럽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선명하게 좌우 대립 구도를 보이지만 미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사회당이 뿌리내리는 데 실패하여 민주당이, 유럽 기준에서는 중도 성향이 미국의 진보를 대변한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사민당, 좌파(Left), 녹색당을, 스웨덴에서는 사민당, 좌파 정당 및 녹색당,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을 진보로 분류했다. 표 1의 결과 계수 표준화(β)를 하여 계수 크기를 비교하면, 진보 정당 지지는 개인 책임 다음으로 소득 평등의 선호에 대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세 나라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특히 스웨덴의 효과는 0.138로 개인 책임의 효과(0.141)와 거의 같다. 표 1의 결과를 요약하면, 성과 나이를 통제한 후 소득 평등에 유의미한

²⁰ 여성에 대한 사회적 태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여성은 노동 시장 참여, 교육, 결혼, 그리고 경쟁 등에 대해 남성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데, 역사적 원인은 다양하며 그 결과는 지속적이다. 이에 대한 문헌 연구는 Paola and Giulian(2017)을 참조.

영향을 갖는 변수는 학력, 소득, 그리고 진보 정당이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운칠기삼’은 독일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한다. 미국과 스웨덴에서 방향은 독일과 같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3국에서의 결과는 어떻게 다른가? 세계 가치 조사에는 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빈번히 참여해왔다. 특히 2015년 조사에는 한국, 일본 및 대만 외에 태국과 필리핀에서 참여했다. 여기에 아직 민주주의 경험 이 오래되지 않은 태국과 필리핀을 제외하고 일본, 한국 및 대만의 자료에 한정한다. 한국, 일본, 대만 및 필리핀 자료를 대상으로 평등주의 선호를 결정하는 요인을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듯, 아시아 3국의 소득 평등에 대한 태도는 선진 민주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비교를 위해 필리핀을 추가했다. 필리핀은 아직 소득 수준이 낮고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않았다.²¹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응답자는 소득 평등에 부정적이다. 개인 책임 효과는 필리핀을 제외한 한국, 일본 및 대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고소득일수록 소득 평등을 반대하며 이 소득 효과는 필리핀을 제외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한편 성공의 운칠기삼 변수에서는 차이를 드러낸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미국, 독일 및 스웨덴에서처럼 성공은 노력보다는 행운의 탓으로 보는 응답자는 소득 평등을 지지한다. 한편 대만과 필리핀에서는 반대로 노력을 성공의 요인으로 평가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아시아에서 정치적 이념과 정당 지지가 소득 평등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은 서구 민주주의에 비해 떨어진다. 한국의 민주당, 민주 노동당, 진보 신당을, 그리고 일본의 민주당, 사민당 및 공산당, 대만의 민진당을 진보로 분류했다. 진보 정당 지지를 1로 보수 정당 지지를 0으로 범주화했다. 동아시아 3국에서 지지 정당의 효과는 서구 3국에서보다 강력하다. 아시아 민주주의에서도 진보 정당에 투표할 응답자는 소득 평등을 지지하지만 대만에서의 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낮다. 한국의 진보 정당 지지자는 그렇지 않은 이에 비해 소득이 더 평

²¹ 2018년 필리핀 1인당 소득은 3,104달러이다. 프리덤하우스 평가에 따르면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가 각각 3, 3을 기록하여 부분적 자유(PF) 상태에 있다.

등해야 한다는 데 10% 더 지지한다. 일본의 진보정당 지지자는 소득평등을 약 5% 더 지지한다. 대만의 진보정당 지지자는 한국과 일본과 달리 그 효과도 약하고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

표 2는 한국, 일본 및 대만의 아시아 민주주의를 대상으로 평등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의 잠재력을 평가한다. 전반적으로 서구 민주주의 3국과 유사하다. 인구학적 요인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평등주의를 지지하는 경향은 한국과 일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평가되며 나이 효과는 한국과 대만에서 발견된다. 학력효과는 3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을 보이지만, 방향은 정반대이다.

표 2를 요약하면, 동아시아 민주주의 3국의 소득 평등 선호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소득이다. 부분적으로 공통되는 변수는 개인 복지에 대한 책

표 2 평등주의의 결정요인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나이	0.002**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여성	0.020 (0.019)	0.073*** (0.018)	-0.005 (0.022)	0.009 (0.020)
학력	0.039 (0.053)	-0.043 (0.042)	0.056 (0.048)	-0.083** (0.035)
소득	-0.162*** (0.041)	-0.298*** (0.035)	-0.145*** (0.037)	-0.184*** (0.027)
개인 책임	-0.067 (0.052)	-0.096*** (0.030)	-0.144** (0.063)	-0.030 (0.037)
운칠기삼	0.150*** (0.036)	0.098*** (0.036)	-0.010 (0.040)	-0.040 (0.030)
진보 정당	0.092*** (0.020)	0.033* (0.018)	0.025 (0.023)	
Observations	706	628	671	1,199
Adjusted R ²	0.081	0.175	0.034	0.042
Residual Std. Error	0.252 (df = 698)	0.222 (df = 620)	0.282 (df = 663)	0.340 (df = 1192)

주: *p<0.1; **p<0.05; ***p<0.01

표 3 정부책임 혹은 개인책임과 평등주의(단위: %)

책임소재	미국	독일	스웨덴	일본	한국	대만
정부책임	75.4	73.3	58.7	71.9	38.5	48.4
개인책임	37.9	60.1	45.8	40.6	21.0	36.7
차이	37.5	13.2	12.9	31.3	17.5	11.7

자료: WVS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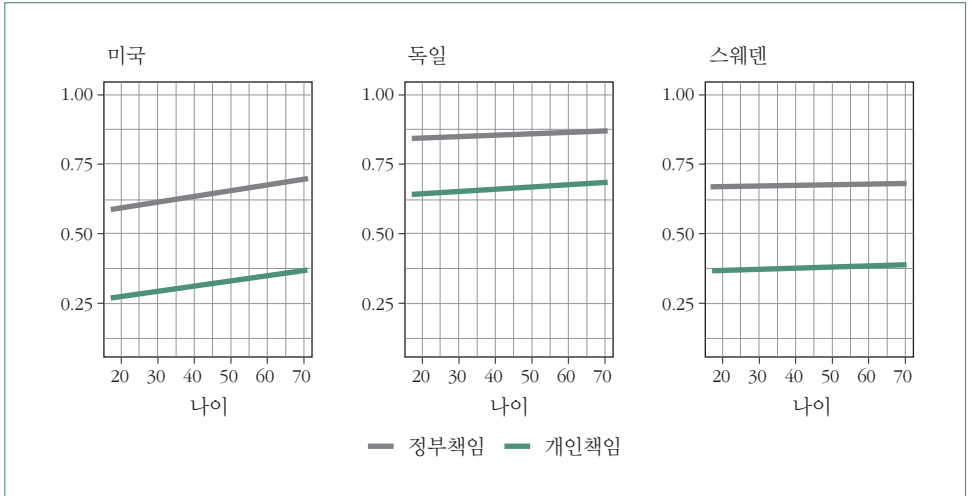
임 소재에 대한 태도, 운칠기삼 그리고 당파성이다. 진보 정당이 소득 평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서구 선진민주주의에서는 보편적인 반면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경우 그 효과는 낮고 대만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져 검증되지 않았다. 서구 선진 민주주의와 다른 주목할 점은 학력 변수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이다. 서구 3국에서 교육 효과는 방향은 다르지만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동아시아 민주주의에서 학력의 차이는 소득평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 정부 또는 개인의 책임?

표 2와 표 3에서 나타나듯, 개인적 복지에 대한 책임에 대한 태도는 소득 평등의 선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더 상세히 관찰할 의미가 있다. 그림 3과 그림 4는 개인 복지를 정부책임 또는 개인책임으로 믿는 집단 간의 소득 평등 선호가 얼마나 차이 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림 3은 개인의 복지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태도가 소득 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미국, 독일 및 스웨덴의 경우를 통해 보여준다.²² 미국에서는 독일이나 스웨덴과는 달리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 평등을 지지하는 반면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그렇지 않다. 정부 책임이라고 보는 응답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응답자에 비해 소득 평등을 지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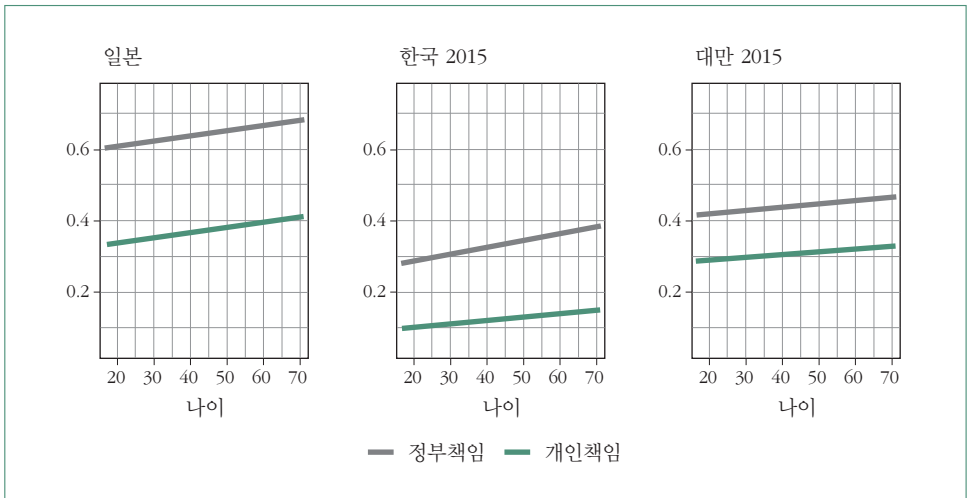
그림 3에서 보듯, 서구 민주주의 3국 모두에서 개인 복지의 책임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소득 평등에 대해 상당히 다른 평가를 내린다. 책임의 가치에 대한 차

²² 수직 축의 수치는 예상 확률이며 통제 변수는 식(1)을 기반으로 나이, 성, 학력, 소득, 성공 요인, 그리고 개인 복지에 대한 태도 등이다.



자료: ISSP

그림 3 정부책임 vs 개인책임



자료: ISSP

그림 4 정부책임 vs 개인책임

이가 소득은 평등해야 된다는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은 미국에서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개인 복지를 정부 책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75.4%가 소득 평등을 지지하는 반면 개인 책임으로 믿는 이는 37.9%가 소득 평등에 찬성한다. 표 3은 미국, 독일, 스웨덴과 동아시아의 일본, 한국 및 대만의 소득 평등 선호를 말한다. 스웨덴에서는 인식의 차이가 가장 작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 소득평등에 대한 차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독일도 평균적으로 소득 평등의 선호가 높으며 책임 소재에 대한 차이에 따른 선호의 차는 13.2%로 서구 3국에서 가장 낮다.

그림 4는 동아시아 3국을 비교한 것이다. 일본은 복지 책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소득 평등의 선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점에서 미국과 유사하다. 책임 소재의 차이에 따른 소득 평등 선호의 차는 31.3%이며 6개국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높다. 한편 대만은 차이가 11.7%로 6개국 중 가장 낮다.

한편 서구 선진 민주주의와는 달리 학력은 3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고 영향력 방향이 나라마다 다르다. 소득은 선진 민주주의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방향과 일치하며,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문화적 요인 가운데 개인 책임 대 정부 책임의 효과를 보면 일본과 대만에서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데 통계적으로 각각 1% 및 10%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운칠기삼’에 동의하면 소득 평등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 행운의 영향력은 한국과 일본에서 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발견된다. 마지막으로 지지 정당에 따라 평등주의가 다른가를 보기 위해 지지 정당을 보수(0)와 진보(1)로 분리하여 그 효과를 보고자 했다. 진보적 정당을 지지할수록 소득 평등을 지지하며 그 효과는 복지에 대한 책임 소재 다음으로 강력하다. 그중에서도 한국에서 민주당 지지자는 소득 평등을 9.2% 더 지지하며 이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한국의 민주당 지지자는 소득 평등에 대해 미국의 민주당 지지자와 비슷한 선호이다. 일본에서는 5% 수준에서 유의미하며 3.3% 더 소득 평등을 지지한다. 대만에서도 방향은 동일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선진 민주주의의 3개국에서는 독일이 전반적으로 평등주의를 가장 선호하며 그중에서도 저소득은 72.5%가 지지한다. 미국은 선진 민주주의 3개국 가운데 평등주의가 가장 미약하여 고소득 집단의 평등주의는 42.6%에 불과하다. 스웨덴은 미국과 독일의 중간 수준에 있다. 또한

스웨덴은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별 차이는 변하지 않고 평행선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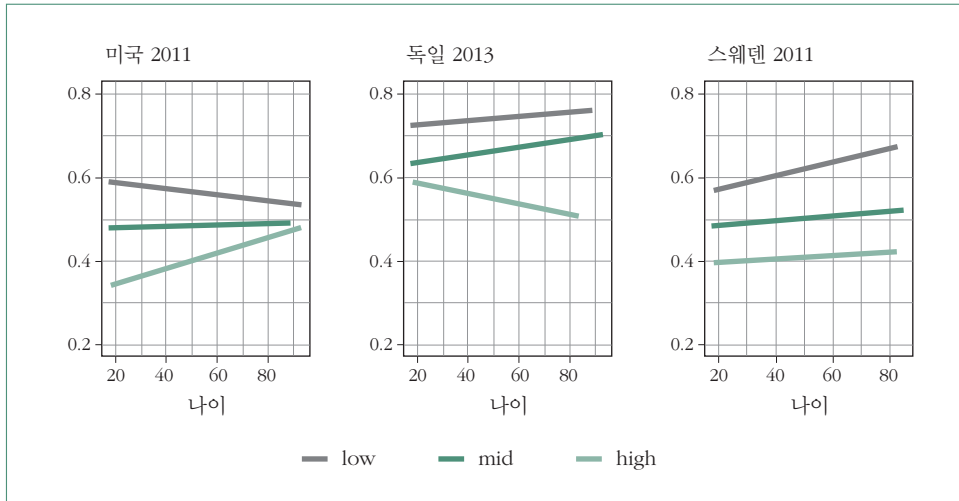
2. 소득 집단별 소득 평등

표 1과 표 2에서 본 것처럼, 소득은 보편적으로 소득 평등의 선호에 영향을 준다. 소득 효과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에서 이제는 소득 집단별로 그 효과가 다른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멜처와 리처드가 대중화시킨 정부 규모와 재분배 논의의 본래 출발점은 소득 규모에 따른 선호의 차이였다. 소득 집단별로 얼마나 영향을 주는 지를 보기 위해 주관적 소득 수준을 저소득, 중간 소득, 그리고 고소득으로 범주화하여 각각의 집단이 갖는 소득 평

표 4 평등 선호

	미국	독일	스웨덴
나이	0.002*** (0.0004)	0.001 (0.0004)	0.001** (0.001)
여성	0.036*** (0.014)	0.025* (0.015)	0.034 (0.021)
학력	0.020*** (0.006)	-0.009** (0.004)	-0.014** (0.006)
개인 책임	-0.044*** (0.003)	-0.028*** (0.003)	-0.030*** (0.005)
중소득	-0.033 (0.020)	-0.044** (0.020)	-0.045 (0.035)
고소득	-0.082*** (0.027)	-0.107*** (0.035)	-0.039 (0.046)
행운	0.003 (0.003)	0.006** (0.003)	0.008* (0.005)
진보 정당	0.099*** (0.017)	0.049*** (0.015)	0.143*** (0.025)
Observations	1,244	1,038	520
Adjusted R ²	0.327	0.136	0.241
Residual Std. Error	0.239 (df = 1235)	0.235 (df = 1029)	0.239 (df = 511)

주: *p<0.1; **p<0.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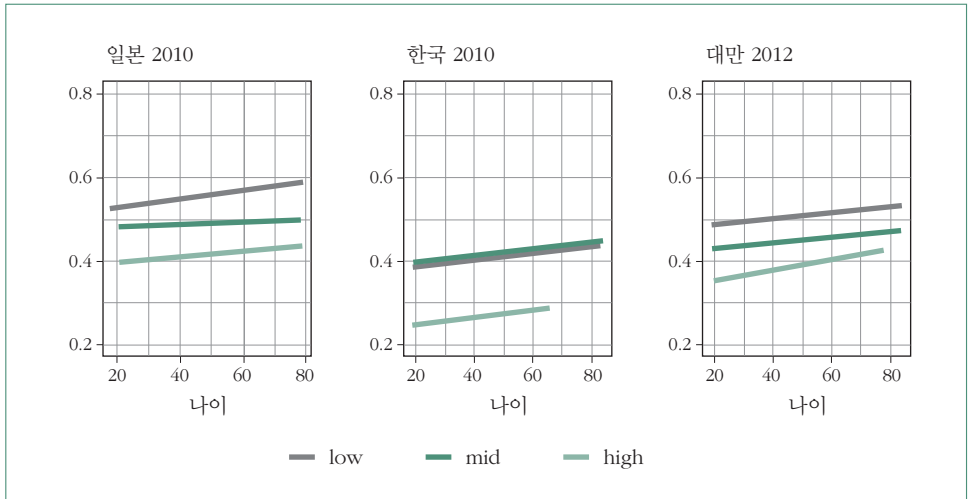
자료: WVS 6, 2010~2014

그림 5 소득규모별 소득평등선호

등 선호를 측정했다. 주관적 소득 구간 1-10을 세 범주, 즉 저소득(1-3), 중간 소득(4-7) 및 고소득(8-10)으로 분리한다. 준거 집단은 저소득층이다. 표 5는 미국, 독일 및 스웨덴을 대상으로 소득 집단별 소득 평등 선호의 추정치이다. 소득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발휘하는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의 중간 소득은 저소득층에 비해 소득 평등을 4.4% 덜 지지한다. 고소득층은 10.7% 덜 지지한다. 미국에서는 고소득층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인다. 한편 스웨덴에서는 소득 규모의 차이는 소득 평등 선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림 5는 미국, 독일 및 스웨덴의 소득 규모별 소득 평등주의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것이다(표 4 참고).²³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첫째, 미국은 나이와 관계 없이 소득 평등주의에 대한 지지가 가장 낮다. 둘째, 소득 평등에 대한 독일의 열의가 가장 높다. 소득 집단별로 차이는 있으나 미국과 스웨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에서 소득 평등주의를 지지한다. 셋째, 소득 집단별 태도는 스웨덴에

²³ 그림 4는 나이, 성, 학력, 지지 정당, 운칠기삼, 그리고 책임 소재 등을 통제한 후 소득 집단별 소득 평등 선호를 예측한 값이다.



자료: WVS 6, 2010~2014

그림 6 소득규모별 소득평등선호

서 가장 뚜렷하다. 저소득은 중간 소득에 비해, 그리고 중간 소득은 다시 고소득 집단에 비해 소득 평등을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저소득에 비해 중간 소득과 고소득 집단은 소득 평등 선호가 낮다.

그림 6은 소득 평등 원리에 대한 동아시아 3개국의 소득 집단별 태도이다. 수평 축은 나이를 뜻한다. 동아시아 4개국의 평등 인식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한국의 중간 소득과 저소득은 소득이 평등해야 한다는데 거의 같은 수준에서 지지하며, 고소득자의 지지는 아주 낮다. 한국의 사례는 복지 정책을 두고 중간층과 저소득층이 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일본의 소득 집단은 전반적으로 한국과 대만에 비해 소득 평등 선호가 높다. 셋째, 대만은 전반적으로 일본보다 낮으며 각 소득 집단은 규모대로 소득 평등 선호를 반영한다.

표 5는 6개국의 소득 집단별 평등주의 선호를 정리한 것이다. 성, 나이, 학력, 개인 책임 인식, 운칠기삼의 요인 등을 통제한 후 얻은 예상 확률이다. 저소득 집단이 가장 평등주의적인 나라는 독일이며 64.1%가 지지한다. 저소득층의 평등주의 지지가 3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스웨덴은 이례적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복지 국가가 누적적으로 작용해 온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스웨덴 고소득

표 5 소득규모별 평등주의(단위: %)

소득규모	미국	독일	스웨덴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저소득	60.0	89.5	73.4	66.5	30.3	45.9	23.1
중소득	52.6	83.2	62.0	61.0	33.0	39.6	13.5
고소득	39.0	71.0	46.0	51.2	18.5	38.1	20.5
격차	21.0	18.5	27.4	15.3	11.8	7.8	2.6

자료: WVS 6

층에서 평등주의를 지지할 가능성은 미국의 고소득층보다도 낮은 13.1%이다. 미국은 선진 민주주의에서는 평등 의식이 가장 미미한 나라로서 미국의 저소득층에서 평등주의를 지지할 확률은 24.6%에 불과하다.

표 5는 몇 가지 특징을 드러낸다. 소득 집단별 차이가 가장 작은 곳은 대만(7.8%)이고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27.4%)이다. 스웨덴에서는 계급 정치가 좌우를 대립 구도로 정착한 나라이기 때문에 소득 집단에서 각각 서로 다른 가치를 주장한다. 소득 규모별 평등주의에 대한 선호를 비교하면 나라별로 크게 다르다. 소득별 격차는 스웨덴에서 가장 크다. 미국의 고소득층에서 소득이 평등해야 하는가에 대해 찬성할 가능성이 46%인데 비해 저소득층의 선호는 73.4%여서 그 격차는 27.4%에 달한다. 한편 필리핀의 소득별 격차는 2.6%에 불과하다. 미국도 소득 집단에 따라 평등에 대한 차이가 선명하다. 둘째, 아시아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서구 3국에 비해 평등주의가 낮다. 계급 정치가 제도화되지 못한 아시아에서 전반적으로 소득별 차이는 크지 않다. 가장 오랜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일본에서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평등에 대한 선호의 차는 15%에 불과하다. 필리핀에서는 그 차이가 2.6%이다. 한국은 소득 규모별 차이(11.8%)가 대만보다 약간 높다. 한국의 저소득층에서 평등주의를 지지할 가능성은 13%이며 고소득층에서는 11.3%로 비슷하다. 일본에서는 전반적으로 평등주의가 낮은 수준에 머물지만 소득 규모의 차이는 분명하다. 일본의 저소득층의 평등주의 지지가 21.7%라면 고소득층의 지지는 9.1%이다. 대만은 일본보다 소득별 차이가 크다.

요약하면, 표 5는 서구 선진 민주주의와 아시아 민주주의는 평등주의에 대해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서구에서 소득 평등에 대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평가는 22.3%가 차이가 나는 반면 아시아 민주주의 4국의 평균 차이는 9.4%에 불과하다.

3. 지지 정당별 차이

서구 민주주의와 동아시아 민주주의가 소득 평등의 선호에서 비견될 만한 점은 지지 정당의 영향력이다.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보수 정당 지지자에 비해 소득 평등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지지 정당의 차이는 정당 체제의 특성에 따라 서로 크게 다르다. 표 6은 지지 정당 즉 보수 또는 진보 정당인가에 따라 소득 평등에 대한 선호에 격차가 생긴다. 계급 정당이 발전한 나라에서는 좌우가 대립적인 정책을 기반으로 한다. 스웨덴은 사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좌파 진영과 중도 우파 진영이 대립하는데, 그 차이는 소득 평등에 대한 선호의 격차로 드러난다.

보수 지지자가 소득 평등을 지지할 가능성이 43.2%라면 좌파 정당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소득 평등 선호는 57%로서 그 차이는 14%에 달한다. 미국에서는 좌우 차이가 약 10%이다. 한편 동아시아 민주주의에서 계급 정당이 발전하지 않았으며 지지 정당의 차이에 따른 소득 평등 선호 격차는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동아시아 3국 간에도 소득 평등의 격차는 서로 크게 다르다. 가장 큰 격차는 한국으로 약 9.1%이다. 일본이 뒤를 이어 3.2%, 대만이 2.5%이다. 일본의 좌우 대립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나이에 따라 격차가 더 벌어진다.

그림 7은 보수 대 진보의 소득 평등에 대한 선호를 나이에 따라 역동적으로 시각화한 자료이다. 그림 7에서 보듯, 서구 선진 민주주의에서 누구를 지지하는

표 6 지지정당별 평등주의(단위: %)

지지정당	미국	독일	스웨덴	일본	한국	대만
보수	41.3	63.9	43.2	48.4	35.4	44.5
진보	51.3	68.8	57.0	51.6	44.5	47.0
차이	-10.0	-4.9	-13.8	-3.2	-9.1	-2.5

자료: WVS 6



자료: WVS 6, 2010~2014

그림 7 지지정당별 소득평등선호

가는 평등주의와 높은 관계를 갖는다. 서구에서 진보적 정당을 지지한 사람은 보수당 지지자보다 모든 연령에서 평등주의를 지향한다. 미국과 스웨덴의 지지 정당별 격차는 가장 크다. 한편 독일의 격차는 그보다 낮다. 그림 7에서 아래 세 그림은 동아시아 민주주의를 포함하며 정치적 차이는 소득 평등의 선호의 격차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평등주의에 대해 동아시아 3국 가운데 가장 뚜렷한 격차를 보이며, 이는 나이와 더불어 다소 증가한다. 일본은 20~30대에서는 좌우별 평등에 대한 선호가 다르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이념과 관계없이 소득 평등을 지지하여 차이는 사라진다. 한국에서도 저소득과 중간소득층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나이가 들면서 평등을 지지한다. 대만 역시 나이와 평등은 긍정적 관계를 갖는다.

IV. 결론: 동아시아 민주주의와 왜소한 복지 국가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특징은 작은 정부이다. 정부 규모는 공급 측면이다. 이 글은 동아시아 복지 국가의 왜소성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를 탐색하기 위해 수요적 측면을 논의했다. 민주주의가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작은 정부는 작은 수요의 탓으로 가정된다. 민의는 구체적으로 소득 평등 선호를 통해 파악하려 했다.

소득 평등의 관점에서 서구 선진 민주주의 3국과 동아시아 민주주의 3국을 비교하면 몇 가지 중대한 공통점과 동시에 차별성도 발견된다. 첫째, 소득은 공통적으로 소득 평등에 대해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6개국 모두에서 소득이 많을 수록 소득 평등에 부정적이다. 소득 평준화는 재분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소득별로 자기 이해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다. 둘째, 당파성은 소득 평등의 선호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당파성 효과는 대만을 제외한 5개 국가에서 나타난다. 진보 정당을 선택하는 사람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에 비해 소득 평등을 더 선호한다. 한편 동아시아 3국 가운데에서는 한국에서만 보수-진보 대립이 소득 평등에 뚜렷한 차이를 만든다. 셋째, 개인적 복지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견해, 즉 정부 책임 대 개인 책임의 차이는 한국을 제외한 5개국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책임으로 보는 사람은 소득 평등을 선호하지 않는다.

서구 민주주의와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학력 효과에서 나타난다. 미국, 독일 및 스웨덴에서 고학력은 방향은 다르지만 소득 평등과 연관성을 갖는다. 미국의 고학력자는 소득 평등에 호의적인 반면 스웨덴과 독일의 고학력층은 소득 평등을 지지하지 않는다. 한편 동아시아 민주주의에서 학력의 영향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 이 점은 학력과 교육이 정치 경제에서 갖는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 볼 문제이다.

수요적 측면에서 볼 때, 당파성의 차이는 서구 선진 민주주의와는 달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한국은 예외적이다. 서구에서 복지 국가의 전개는 계급 정당의 발전과 정당 정부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선거를 통해 계급적 관점이 동원되고 선거 결과는 사회 정책으로 표출된 것이다. 당파성 이론의 관점에

서 보면, 동아시아의 왜소한 복지 국가는 진보와 보수의 균열이 정치적으로 전환되지 않았던 역사의 결과일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북미나 유럽의 국가는 고사하고 남미에서 볼 수 있는 사민당 정부 또는 페론주의 등 포퓰리즘 현상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강명세, 2015; 양재진, 2015; Haggard and Kaufman, 2008). 동아시아 지역에 특히 강력히 자리 잡은 냉전 체제는 정치 체제를 보수화시키는데 기여했다. 이는 특히 한국과 대만의 복지 국가 형성에 중대한 유산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수적 정치는 사회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력 자원의 분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편 산업화 전략 역시 사회 복지 정책의 방향에 영향을 준다(Haggard and Kaufman, 2008: 139). 동아시아 국가에서 추진해 온 수출 주도형 산업화는 저임 전략에 기반하는 점에서 노동 탄압적이며 노동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았다. 사회 복지의 강화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극도로 억제되었다. 반면, 수입 대체 산업화의 남미에서는 도시 노동자에게 유리한 사회 정책이 동반되었다.

투고일: 2019년 6월 10일 | 심사일: 2019년 6월 28일 | 게재확정일: 2019년 7월 30일

참고 문헌

- 강명세. 2015. “반공주의와 정당 체제의 왜곡.” 김동춘 외 편. 『반공의 시대-한국과 독일, 냉전의 정치』, 파주: 돌베개.
- 양재진. 2014. “제도주의적 권력자원론과 한국의 노동, 자본, 정치가의 복지행정선호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정치학회보』 48(2), 79-102.
- Alesina, Alberto, and Edward L. Glaeser. 2004.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Oxford University Press.
- Alesina, Alberto and Paola Giuliano. 2009.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NBER Working Paper* 14825, March, 1-40.
- Alesina, Alberto and Paola Giuliano. 2013. “Culture and Institutions.” *NBER Working Paper* 19750, December, 1-68.
- Alesina, Alberto, and Paola Giuliano. 2015. “Culture and Institution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53 (4), 898-944.

- Alesina, Alberto, Elie Murard, and Hillel Rapoport. 2019. "Immigration and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in Europe." *NBER Working Paper 25562*, February, 1-66.
- Bartels, Larry. 2008. *Unequal Democracy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Gilded 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enabou, Roland and Efe A. Ok. 2001. "Social Mobility and the Demand for Redistribution: The POUM Hypothesi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2, May, 447-487.
- Beramendi, Pablo, Silja Hausermann, Herbert Kitchelt, and Hanspeter Kriesi, eds. 2015. *The Politics of Advanced Capit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ix, Carles. 2003. *Democracy and Redistribu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radley, D., E. Huber, S. Moller, F. Nielson, and J. D. Stephen. 2003. "Distribution and Redistribution in Postindustrial Democracies." *World Politics* 55, 93-228.
- Brooks, Clem and Jeff Manza. 2007. *Why Welfare States Persist: The Importance of Public Opinion in Democraci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velyn Huber, John D. Stephens. 2014. "Income inequality and redistribution in post-industrial democracies: demographic, economic and political determinants." *Socio-Economic Review* 12(2), 245-267.
- Gilens, Martin. 2012. *Affluence and Influ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uiliano, Paola. 2017. *Gender: An Historical Perspective*. NBER working paper No. 23635.
- Guiso, Luigi, Paola Sapienza, and Luigi Zingales. 2016. "Long-Term Persistence."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14, December, 1401-1436.
- Haggard, Stephan and Robert H. Kaufman. 2008. *Development, Democracy, and Welfare Stat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ibbs, Douglas A. 1977. "Political Parties and the Macro Economic Poli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1, December, 1467-1487.
- Iversen, Torben and David Soskice. 2001. "An Asset Theory of Social Policy Preferenc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 December, 875-893.

- Iversen, Torben, and D. Soskice. 2009. "Distribution and Redistribution: The Shadow of the Nineteenth Century." *World Politics* 61(3), 438-486.
- Jacobs, Lawrence and Robert Y. Shapiro. 2000. *Politicians Don't Pand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elly, Nathan J., and Peter K. Enn. 2010. "Inequality and the Dynamics of Public Opinion: The Self-Reinforcing Link Between Economic Inequality and Mass Prefere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4, July, 855-870.
- Kenworthy, L. and J. Pontusson. 2005. "Rising Inequality and the Politics of Redistribution in Affluent Countries." *Perspectives on Politics* 3(3), 449-471.
- Lupu, Noam and Jonas Pontusson. 2011. "The Structure of Inequality and the Politics of Redistribu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5, May, 316-336.
- Meltzer, Allan H., Scott F. Richard. 1981. "A Rational Theory of the Size of Govern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 February, 914-927.
- Piketty, Thomas. 1995. "Social Mobility and Redistributive Politic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0, August, 551-584.
- Piketty, Thomas. 2018. "Brahmin Left vs. Merchant Right: Rising Inequality and the Changing Structure of Political Conflict." *WID Working Paper*, March, 1-180.
- Pontusson, Jonas and David Weisstanner. 2017. "Macroeconomic Conditions, Inequality Shocks and the Politics of Redistribution." *Th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5, April, 31-58.
- Rehm, Philipp. 2015. *Risk Inequality and Welfare Sta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eve, Kenneth, and David Stasavage. 2017. "Wealth Inequality and Democracy."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0: 451-68
- Stubager, Rune. 2008. "Education-based group identity and consciousness in the authoritarian-liberal value conflict."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8, December, 204-233.
- Weaklim, David L. 2002. "The Effects of Education on Political Opinions: An Internatio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4, June, 141-157.

Abstract

Comparing Preference for Redistribution in East Asian Advanced Democracies

Miongsei Kang *Sejong Institute*

This paper aims at comparing preference for redistribution in East Asian Welfare States. In democracy, public opinion impacts policy making, which means that mass preference is valuable data for policymakers. Mass preference, the microfoundation of welfare states, is currently gaining more attention. Welfare attitude has traditionally been studied through socioeconomic and demographic factors, and political orientation. However, recent studies focus on psychological and cultural factors that influence mass preference. Social preference is therefore essential criteria for a comparative study because it has forged differently in each country. This paper starts by introducing recent studies on preference for redistribution.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I examine if income and other variables have an effect on preference for redistribution. The next section involves data selection. I use the World Value Survey to compare advanced democracies; symbolic welfare states (US, Germany, Sweden) to East Asian countries (Japan, South Korea, Taiwan). The effects of income groups, cultural value and partisanship on income equality are the focus. In conclusion, I sum up the results and propose future avenues in research.

Keywords | Redistribution, Mass Preference, East Asian Democracy, Welfare State

